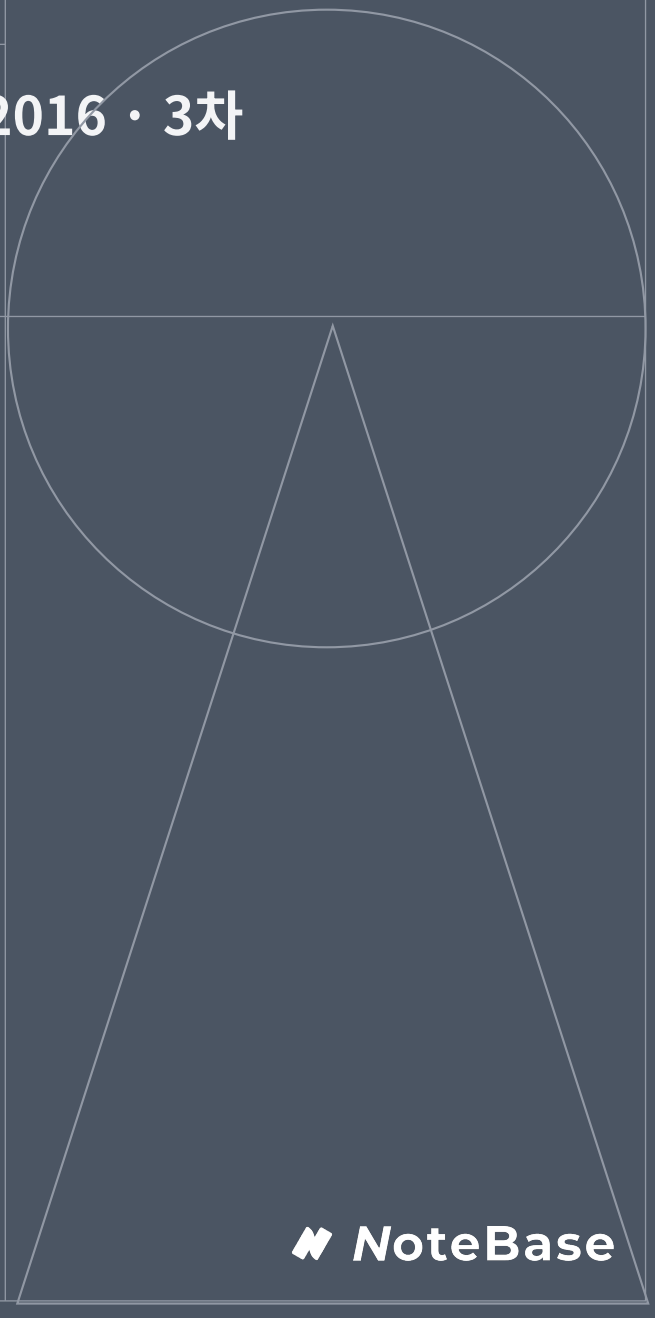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6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6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6 · 3차

문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A컴퓨터 대리점은 100만원의 최신형 노트북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본 甲(만18세)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A컴퓨터 대리점에서 6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甲과 함께 A컴퓨터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①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② 甲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A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③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이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그러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라는 점이다.

사례 정리

甲은 만 18세이므로 성년인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이다. 6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약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이다. 지문에는 계약 당시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판단한다.

용어 풀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지만, 적법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는 법률행위이다.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보는 제도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로 정하므로 甲은 부모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의사는 계약 상대방인 A컴퓨터 대리점에 표시해야 하며,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을 진다. 한편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틀린 표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올바른 표현: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나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② X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취소 후의 반환 문제와 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위약금 지급은 서로 다르다.
틀린 표현: '취소하려면 A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 '甲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A컴퓨터 대리점에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O
민법 제140조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X
甲이 계약 전에 적법하게 혼인하였다면 성년의제에 따라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행위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혼인 미성년자의 무동의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틀린 표현: '혼인하였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올바른 표현: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다른 무효 사유가 없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취소할 수 있다'를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또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와 혼동하게 만든다. ②는 계약 취소의 요건과 취소 후 반환관계를 섞은 선지이다. ③에서는 부모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독자적인 취소권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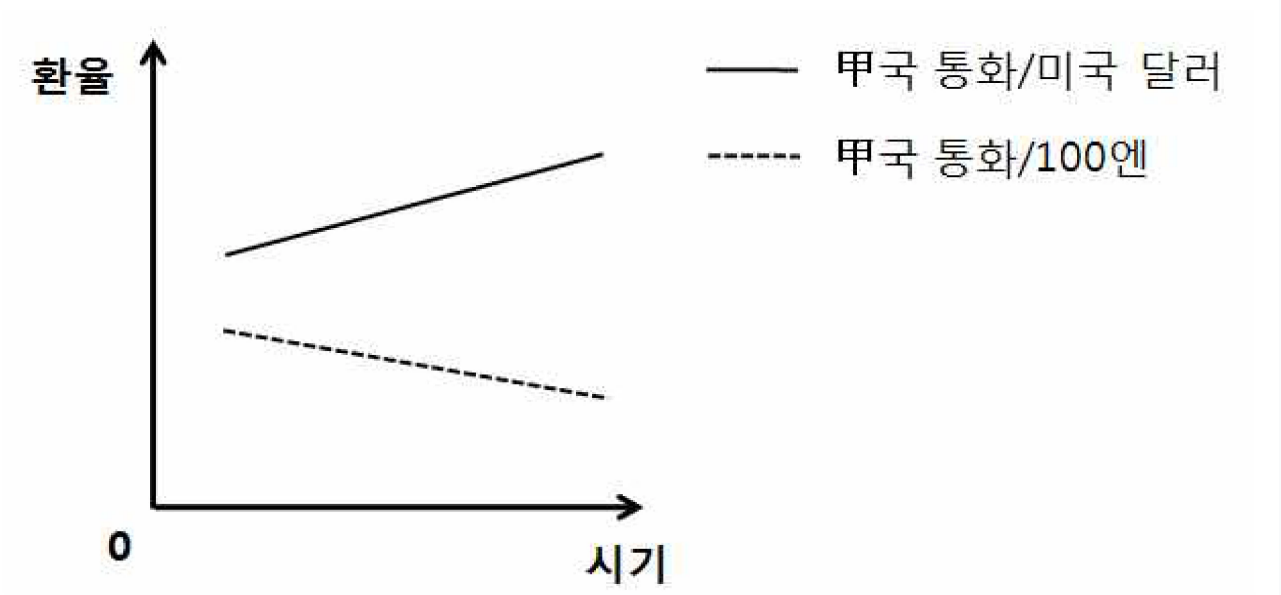
먼저 행위자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인지 판단한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으로 정리하고, 취소권자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포함됨을 적용한다. 혼인 사실이 제시되면 성년의제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미성년자의 무동의 법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이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NoteBase

문 2. 다음 그림은 甲국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엔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② 달러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③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甲국에서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환율 그래프의 표시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환율 상승·하락을 각 통화의 가치와 수출입 가격 변화로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환율, 가로축은 시기임을 확인한다.
2. 甲국 통화/미국 달러 환율은 상승하므로 달러 대비 甲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3. 甲국 통화/100엔 환율은 하락하므로 엔화 대비 甲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4. 이 두 변화가 외채 상환 부담과 수출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甲국 통화가 늘어나므로 달러는 강세, 甲국 통화는 약세이다. 반면 같은 100엔을 사는 데 필요한 甲국 통화가 줄어들므로 엔화는 甲국 통화에 대해 약세이다. 따라서 달러는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이고,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하락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그래프에서 甲국 통화/100엔 환율이 하락하므로 같은 엔화 외채를 갚는 데 필요한 甲국 통화가 줄어든다. '엔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엔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② X — 甲국 통화/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甲국 통화/100엔 환율은 하락하므로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엔화가 늘어난다. '달러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상승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달러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③ X — 甲국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가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같은 甲국 통화 표시 수출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낮아진다.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다.
④ O — 甲국 통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달러 가격의 미국산 부품을 수입할 때 더 많은 甲국 통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甲국에서의 수입 가격이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환율 수치의 상승을 곧바로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으로 읽는 것이 함정이다. '甲국 통화/외국 통화' 환율이 상승하면 해당 외국 통화는 강세이고 甲국 통화는 약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이 '자국 통화/외국 통화'인지 확인한다. 이 환율이 오르면 외국 통화 강세·자국 통화 약세이므로 외화 표시 채무와 수입품의 자국 통화 가격은 상승하고, 자국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환율이 내리면 그 반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국 통화/외국 통화 환율 상승은 외국 통화 강세, 수입 부담 증가, 수출품의 외화 가격 하락이다.

NoteBase

문 3.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 총 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③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④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내총생산의 지출 측정, 명목 GDP, 마찰적 실업,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지출 측면의 GDP: 소비·투자·정부지출에 순수출을 더한 값이며,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다.
명목 GDP: 해당 연도의 가격과 생산량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이므로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가 모두 반영된다.
마찰적 실업: 더 나은 일자리 탐색이나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계산할 때에는 수출 자체가 아니라 순수출을 더한다. 틀린 표현은 '수출'이며, 올바른 식은 $GDP = C + I + G + (X - M)$이다.

② O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생산량이 늘 때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때도 증가할 수 있다.

③ X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 맞지만, 이를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마찰적 실업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④ X
경기 침체와 통화 가치 하락, 즉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개념은 스태그플레이션이며,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수출과 순수출을 바꾸어 놓았고, ③은 마찰적 실업의 자발성 여부를 뒤집었다. ④는 경기 침체와 결합한 물가 상승을 디플레이션으로 제시하여 스태그플레이션과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지출식에서는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인지 확인하고, 명목 GDP에는 가격 변화도 반영된다는 점을 본다. 실업은 발생 원인과 자발성 여부를 함께 구별하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DP 지출식은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명목 GDP는 가격과 생산량,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탐색, 불황+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NoteBase

문 4.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다음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① (가)는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 현상으로 간주한다.
② (가)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나)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가)는 학교가 사회화와 인력 배치를 통해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이고, (나)는 학교가 기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갈등론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이 합의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로 보고, 각 제도가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수행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키워드는 합의·통합·안정이다.
갈등론은 사회를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대립하는 장으로 보고,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익과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는 대립·지배·불평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론은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정상 상태로 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사회 통합이 흔들린 일시적·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② X. 틀린 표현은 '특정 계층의 합의'이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정 계층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강요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에 가깝다.
③ O. 갈등론은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여 기존의 불평등을 유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④ O. 갈등론은 부·권력·명예와 같은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합의'만 보고 기능론의 특징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능론의 합의는 '특정 계층'만의 합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가치'는 갈등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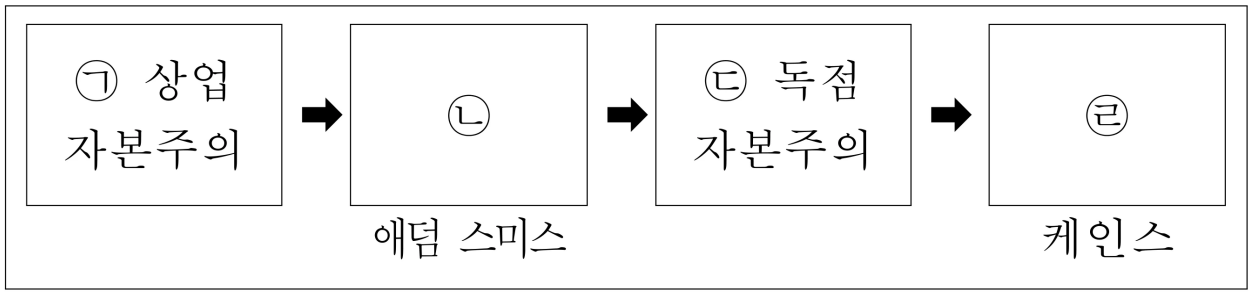
사회 제도가 통합·안정·사회화·적재적소 배치에 기여한다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지배 계급의 이익·불평등 재생산·희소가치를 둘러싼 대립을 강조한다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합의라는 단어가 나와도 합의의 주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인지 특정 계층인지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합의와 통합, 갈등론은 지배와 대립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시기에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② ㉡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③ 세계 대공황은 ㉢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④ ㉣ 시기에는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본주의의 변천을 상업 자본주의 → 산업 자본주의 → 독점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의 순서로 파악하고,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를 각 단계의 핵심 사상가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도식의 ㉡은 산업 자본주의, ㉣은 수정 자본주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상업 자본주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상주의에 따라 국가가 무역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자유방임적 관점은 애덤 스미스와 연결되는 ㉡ 산업 자본주의 시기의 설명이다.

② O
㉡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 자본주의 시기이다.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중시하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③ X
세계 대공황은 독점 자본주의인 ㉢의 등장 배경이 아니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올바르게는 '세계 대공황은 ㉣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이다.

④ X
㉣ 수정 자본주의 시기의 케인스는 유효 수요의 부족이 불황과 실업을 낳는다고 보고 총수요 관리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공급보다 수요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이다.

오답 포인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 상업 자본주의에 연결하거나, 세계 대공황을 ㉢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세계 대공황은 독점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어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업-산업-독점-수정'의 순서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애덤 스미스는 산업 자본주의·자유방임·작은 정부,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유효 수요·정부 개입과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스미스는 시장 자율, 케인스는 수요 관리이다. 대공황 이후 독점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하는 (가), (나)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집단학살(Genocide) 금지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원칙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범죄인인도조약, 한·일어업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①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②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④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가)와 조약인 (나)의 성립 방식, 국내법적 효력, 국회 동의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우리나라가 별도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규범이다.
조약 =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상의 문서이다.
비준 =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최종적인 동의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핵심 구분

(가)의 집단학살 금지원칙, 조약 준수 원칙, 전쟁법의 일반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고, (나)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은 조약에 해당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의 체결·비준권은 조약에 관한 권한이며, 국회의 동의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중요 조약 등에 요구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조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므로 비준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는 대상은 조약이다.
틀린 표현: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올바른 표현: '조약인 (나)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가)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다.'

② O
(나)는 조약이므로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되면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X
(가)는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도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중요 조약 등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틀린 표현: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올바른 표현: '(가)는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조약 중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중요 조약 등은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X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관할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하므로, (가)나 (나)에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강제적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틀린 표현: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올바른 표현: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특별협정, 조약의 관할 조항, 선택조항 수락 선언 등의 방식으로 관할에 동의한 범위에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도 조약의 체결 절차인 비준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바꾼 함정이다.
④는 국제법상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성립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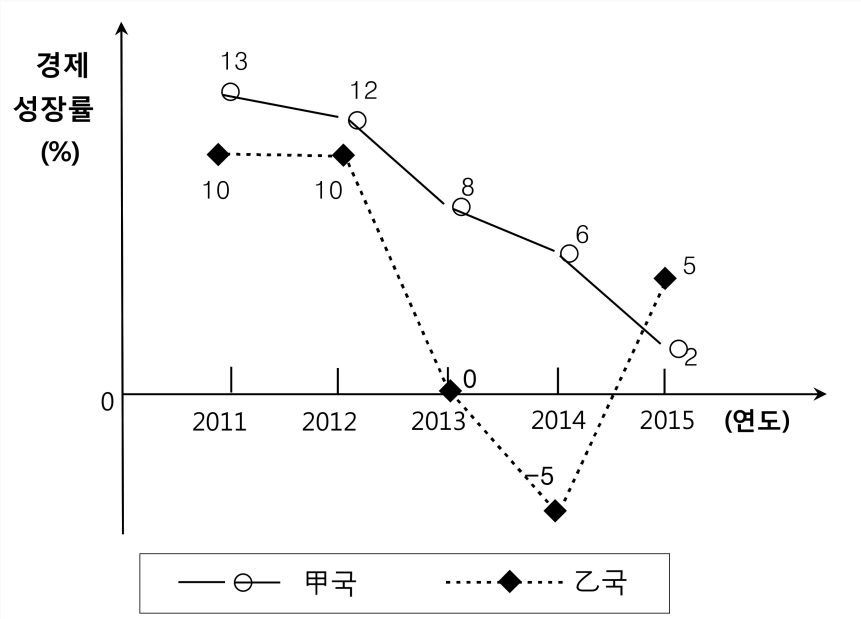
먼저 제시된 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지 국가 간 합의인 조약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조약의 체결·비준 주체는 헌법 제73조, 중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는 헌법 제60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당사국의 동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법규와 적법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 체결·비준은 대통령, 중요 조약의 동의는 국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국가의 동의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의 그림은 甲국과 乙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 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 GDP - \text{전년도 실질 } GDP}{\text{전년도 실질 } GDP} \times 100$

① 甲국의 경제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② 乙국의 경제규모는 2015년에 비해 2013년이 크다.

③ 乙국의 경제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013년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④ 2011년 경제규모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에 대한 증감률이므로, 성장률의 높낮이와 경제규모 자체의 증감을 구분하고 여러 해의 성장률은 누적해서 판단해야 한다.

조건 정리

甲국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3%, 12%, 8%, 6%, 2%로 모두 양수이다.
乙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10%, 10%, 0%, -5%, 5%이다.
경제규모는 실질 GDP의 수준을 뜻하며, 성장률이 양수이면 전년보다 커지고 음수이면 전년보다 작아진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경제 성장률이 g%일 때 올해 실질 GDP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ft(1+(g)/(100))
연도별 경제규모를 비교하려면 각 연도의 성장률을 전년도 경제규모에 차례로 곱해야 한다.

계산 과정

乙국의 2012년 실질 GDP를 100이라고 둔다. 2013년 성장률이 0%이므로 2013년은 100이다. 2014년에는 5% 감소하므로 $100 \times 0.95 = 95$이다. 2015년에는 다시 5% 성장하므로 $95 \times 1.05 = 99.75$이다. 따라서 2013년의 100이 2015년의 99.75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① X — 甲국의 성장률은 매년 낮아지지만 모두 0%보다 크므로 경제규모는 계속 커진다. 틀린 표현은 '경제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경제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이다.
② O — 乙국의 2012년 경제규모를 100으로 두면 2013년은 100, 2014년은 95, 2015년은 99.75가 된다. 따라서 2013년의 경제규모가 2015년보다 크다.
③ X — 乙국의 2013년 성장률은 0%이므로 전년도와 경제규모가 같으며 감소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013년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성장률이 -5%인 2014년에 전년도보다 경제규모가 감소하였다'이다.
④ X — 그래프에는 두 나라의 성장률만 있고 기준이 되는 실질 GDP 수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이며, 올바르게는 '2011년 두 나라의 경제규모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알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②는 -5% 감소 뒤 5% 증가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100에서 5% 감소한 뒤 5% 증가하면 99.75이므로 원래보다 작다. ④는 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경제규모도 더 크다고 단정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성장률의 부호로 전년 대비 경제규모의 증가·감소를 판단한다. 여러 연도의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성장률을 해마다 누적 적용한다. 서로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는 초기 실질 GDP가 주어져야 비교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장률 하락은 성장 둔화이지 곧바로 경제규모 감소가 아니다. 같은 비율의 하락과 상승도 기준값이 달라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8. 다음의 밑줄 친 (가)~(라)와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난 해 해양경찰이 된 甲은 함정을 타고 바다를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인천 앞바다 전체가 (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해 비슷한 시기에도 거센 (다) 비와 바람으로 인해 좌초된 (라) 선박을 구조하는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에 해양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① (가)와 같은 현상은 (나)와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② (나)와 같은 현상은 (다)와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③ (다)와 같은 현상은 (라)와 같은 현상에 비해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
④ (가)와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라)와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현상을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으로 구분하고, 각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몰가치성·보편성·존재 법칙·통제된 실험의 상대적 용이성이 특징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반영된 사회생활 속 현상으로, 가치 함축성·특수성·당위 법칙·통제된 실험의 곤란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 일기예보와 (라) 선박 구조 활동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나) 태풍과 (다) 비와 바람은 자연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 일기예보는 인간이 기상 자료를 해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특수성이 나타난다. 반면 (나) 태풍은 자연 현상으로 보편성이 나타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나)는 가치 함축적이다'이다. (나) 태풍과 (다) 비와 바람은 모두 자연 현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몰가치적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다)가 (라)에 비해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이다. 자연 현상인 (다)는 사회·문화 현상인 (라)보다 통제된 실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복합적인 의지와 가치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④ X — 틀린 표현은 '(라)는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이다. (가)와 (라)는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 존재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나), (다)와 같은 자연 현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일기예보에 자연 현상이 포함된다고 해서 일기예보 자체를 자연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 태풍·비·바람은 자연 현상이지만, 이를 관측하고 예측하거나 선박을 구조하는 활동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상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활동인지 구분한다. 인간의 활동이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가치 함축성·당위 법칙·실험 곤란성을 적용하고, 자연계의 현상이면 자연 현상의 보편성·몰가치성·존재 법칙·실험 용이성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현상은 보편·몰가치·존재 법칙,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가치 함축·당위 법칙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의 밑줄 친 '새로운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A회사는 직급 단순화와 정기승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예전의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직급이 사라지고 팀원-팀장의 2단계로 단순화 하였다. 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팀장 외의 직원은 팀원으로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매년 누적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즉,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① 구성원의 재량권은 축소된다.

② 무사 안일주의 문화가 팽배해진다.

③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

④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급을 단순화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탈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을 묻는다.

핵심 개념

탈관료제적 조직은 수평적 관계, 분권화, 자율성, 능력·성과 중심의 보상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이다.
관료제적 조직은 수직적 위계, 권한의 집중, 규칙과 절차,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경직되기 쉽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재량권은 축소된다'가 틀린 표현이다.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권한이 분산되고 구성원의 자율성이 커지므로 재량권이 확대된다.
② X — '무사 안일주의 문화가 팽배해진다'가 틀린 표현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은 구성원의 책임성과 성과 동기를 높이므로 무사 안일주의를 억제한다.
③ X —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제시된 조직은 근속연수나 경력보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
④ O — 수평적 관계와 분권화된 권한 구조는 의사결정과 업무 조정을 신속하게 하므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재량권 축소, ②의 무사 안일주의, ③의 경력 중심은 모두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이나 연공서열과 연결되는 표현이다. 지문의 직급 단순화, 수평적 관계, 권한과 책임의 부여, 능력·성과 중심 보상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평적 관계·권한 분산·성과 중심이 제시되면 탈관료제적 조직으로 보고 자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커진다고 판단한다. 수직적 위계·권한 집중·규칙·연공서열이 제시되면 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탈관료제는 수평·분권·성과·유연, 관료제는 위계·집권·규칙·연공이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어떤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부모와 자녀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자녀의 계층	상	3	5	2
	중	4	11	35
	하	3	24	13

①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② 부모와 자녀 모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③ 부모의 하층 인구수와 자녀의 하층 인구수는 동일하다.

④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세대 간 이동표에서 행 합계는 자녀의 계층별 비율, 열 합계는 부모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다. 대물림은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은 대각선 칸으로 판단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을 확인한다.
2. 각 열을 합산해 부모의 상·중·하층 비율을 구하고, 각 행을 합산해 자녀의 상·중·하층 비율을 구한다.
3. 대각선은 계층 대물림, 대각선의 오른쪽 위 영역은 상승 이동, 왼쪽 아래 영역은 하강 이동으로 구분한다.

핵심 근거

부모 계층별 합계는 상층 10%, 중층 40%, 하층 50%이고, 자녀 계층별 합계는 상층 10%, 중층 50%, 하층 40%이다. 부모 계층별 대물림 비율은 상층 3/10인 30%, 중층 11/40인 27.5%, 하층 13/50인 26%이므로 상층이 가장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계층인 대각선 값을 각 부모 계층의 열 합계로 나누면 상층 30%, 중층 27.5%, 하층 26%이다. 따라서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② X — 부모의 계층 구성은 상층 10%, 중층 40%, 하층 50%로 피라미드형이지만, 자녀는 상층 10%, 중층 50%, 하층 40%로 중층이 가장 많다. 틀린 표현인 '부모와 자녀 모두 피라미드형'은 '부모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는 중층이 가장 많은 구조'로 고쳐야 한다.
③ X — 부모의 하층 인구 비율은 하층 열의 합인 50%이고, 자녀의 하층 인구 비율은 하층 행의 합인 40%이다. 총인구가 같으므로 인구수도 서로 다르다. 틀린 표현인 '동일하다'는 '부모의 하층 인구수가 자녀의 하층 인구수보다 많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상승 이동은 부모 중층에서 자녀 상층 5%, 부모 하층에서 자녀 상층 2%, 부모 하층에서 자녀 중층 35%를 합한 42%이다. 하강 이동은 부모 상층에서 자녀 중층 4%, 부모 상층에서 자녀 하층 3%, 부모 중층에서 자녀 하층 24%를 합한 31%이다. 틀린 표현인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는 '상승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대물림 비율을 대각선 수치 3%, 11%, 13%만 비교하면 하층이 가장 높다고 오인한다. 계층별 대물림 비율은 각 대각선 값을 해당 부모 계층의 전체 인구, 즉 열 합계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행 합계와 열 합계를 뒤바꾸면 부모와 자녀의 계층 구조 및 상승·하강 이동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과 열이 각각 누구의 계층인지 확정한 뒤 행·열 합계로 계층 구조를 파악한다. 대물림 비율은 대각선 값을 출발 계층인 부모 계층의 합계로 나누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계층에서 자녀 계층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행 합계는 자녀, 열 합계는 부모, 대각선은 대물림이다. 대물림 '비율'의 분모는 부모의 해당 계층 전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표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보장 제도의 종류〉

구분	(가)	(나)	(다)
대상	전 국민	생계 곤란자	지원이 필요한 국민
효과	상호 부조	소득 재분배	정상적 사회생활 지원
성격	금전적·물질적 지원		비물질적 지원

① (나)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다)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③ (가)와 (나)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 보장 제도의 세 유형인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대상·재원·지원 방식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사회 보험: 국민이 보험료를 분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가입자와 수혜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며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가진다.
(나) 공공 부조: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 등 개인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비용은 조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 재정으로 부담한다.
② O — (다)는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와 여건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③ X — '(가)와 (나)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가)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으므로 가입자와 수혜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지만, (나) 공공 부조는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조세 부담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는 가입자와 수혜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나)는 가입 제도가 아니어서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이다.
④ O — (나) 공공 부조는 생계가 곤란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가) 사회 보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회 보험의 '가입자와 수혜자의 원칙적 일치'를 공공 부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함정이다. 공공 부조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가 아니라 생활 곤란 여부와 같은 수급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가입·상호 부조가 보이면 사회 보험, 조세·생활 곤란자·소득 재분배가 보이면 공공 부조,
상담·돌봄·재활 등 개인별 비금전적 지원이 보이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공공 부조는 정부 재정, 사회 서비스는 개인별 비금전적 지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개념	해당하는 사례
(가)	대학에 합격한 甲은 입학식 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나)	축구 선수인 乙은 중요한 시합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던 중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	현상 수배범을 추격하던 해양경찰관 丙이 동료 丁에게 무전을 보내 예상 도주로에 미리 대기하게 하여 결국 범인을 검거하였다.

① (가): 예기사회화, (나): 역할 갈등, (다): 협동

② (가): 예기사회화, (나): 역할 행동, (다): 협동

③ (가): 재사회화, (나): 역할 갈등, (다): 갈등

④ (가): 재사회화, (나): 역할 행동, (다): 협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서 예기사회화, 역할 갈등, 협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기사회화: 장차 속하게 될 집단이나 맡게 될 지위에 필요한 가치와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다. 입학 전에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것이 해당한다.
재사회화: 기존의 가치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다.
역할 갈등: 한 사람이 가진 둘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태이다. 선수로서 경기장에 가야 하는 요구와 자녀로서 병원에 가야 하는 요구가 충돌한 것이 해당한다.
역할 행동: 특정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이다.
협동: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돕는 상호 작용이다. 해양경찰관들이 구조와 예인을 분담한 것이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대학 입학 전에 대학 생활을 준비했으므로 예기사회화, (나)는 선수와 자녀의 역할 요구가 충돌했으므로 역할 갈등, (다)는 구조를 위해 업무를 나누어 도왔으므로 협동이다. 세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나)의 '역할 행동'이다. 어느 역할을 수행한 장면이 아니라 경기장과 병원 중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장면이므로, 올바르게는 '역할 갈등'이다.
③ X — (나)의 역할 갈등만 옳다. (가)의 '재사회화'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아직 대학생이 되기 전에 새 지위에 필요한 행동을 미리 익히는 '예기사회화'이다. (다)의 '갈등'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공동의 구조 목표를 위해 서로 돕는 '협동'이다.
④ X — (다)의 협동만 옳다. (가)의 '재사회화'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예기사회화'이고, (나)의 '역할 행동'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역할 갈등'이다.

오답 포인트

입학 전 준비를 새로운 생활 양식의 학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사회화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아직 얻지 않은 지위를 미리 준비한다는 점이 예기사회화의 결정적 단서이다. 또한 (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태이므로 역할 행동이 아니라 역할 갈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래의 지위를 미리 준비하면 예기사회화, 기존 생활 양식을 버리고 새롭게 배우면 재사회화로 판단한다. 여러 지위의 요구가 충돌하면 역할 갈등, 기대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면 역할 행동으로 판단한다. 여러 주체가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 도우면 협동이다.

암기 포인트

미리 준비하면 예기사회화, 역할끼리 부딪히면 역할 갈등,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면 협동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① (가)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대표된다.

③ (가), (나)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④ (가), (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죄형법정주의의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제도 모두 국가의 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구속적부심사제도 = 체포·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행위 전에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공통 목적은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구속적부심사제도이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타당하다.

② O
(나)는 죄형법정주의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대표된다.

③ O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법률로 제한한다. 두 원칙 모두 형사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므로 타당하다.

④ X
두 제도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틀린 표현: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른 표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이 함정이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죄형법정주의는 수사·처벌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본권 보장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속·영장·적부심사는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통제를, 범죄와 형벌의 사전 법정은 죄형법정주의를 뜻한다. 두 개념의 목적을 묻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국가 형벌권 제한'과 연결하고 '국가 권력의 효율성 증대'와는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구속적부심은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는 범죄·형벌의 금지이며, 둘 다 국가 형벌권을 제한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1심 재판에서 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제2심 재판 절차도 제1심 재판 절차와 거의 같다. 제2심 판결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① 법관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있다.

②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거 재판은 단심제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④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심급제도의 취지와 예외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심급제가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모든 재판이 반드시 3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심급제도 = 하급심의 재판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법원 사이에 재판의 순서와 위계를 둔 제도이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핵심 구분

심급제도의 중심 취지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에게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주어 재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사·형사·행정재판 등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운영되지만,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소송과 같이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이 되는 단심제 재판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여러 심급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면 하급심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심급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된다.

② O —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면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고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다.

③ O — 모든 재판이 3심제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소송처럼 대법원이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의 선거재판도 있다.

④ X — 심급제도의 직접적인 취지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틀린 표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올바른 표현: '하급심의 오류를 시정하고 당사자에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어 재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재판의 독립성'은 사법제도와 관련된 긍정적인 표현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심급제도의 고유한 목적이 아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이고, 심급제도는 상급심을 통한 오류 시정과 권리 구제의 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급제도의 목적을 묻는 경우에는 '오류 시정·공정한 재판·권리 구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법부의 권위 강화'나 '법관의 독립 확보'처럼 사법제도의 다른 원칙을 가져온 표현은 심급제도의 직접적인 취지가 아니다. 또한 심급의 수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단심제·2심제·3심제로 달라질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심급제도는 위상 강화가 아니라 오류 시정과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행정 쟁송의 사례이다. (㉠)과 (㉡)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 甲은 00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00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을 행정청에 요구하였다.
0. 공무원인 乙은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보기>

ㄱ. (㉠)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ㄴ. (㉡)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한다.
ㄷ. (㉠)은 행정소송, (㉡)은 행정심판이다.
ㄹ. (㉠)과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 판단 범위, 판결의 기속력과 최종 판단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법원의 판결로 제거하는 행정소송이다.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사례 정리

甲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공개라는 처분의 이행을 행정청에 요구하므로 ㉠은 의무이행심판이다. 乙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므로 ㉡은 취소소송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하는 사법 절차이다. 행정심판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다. ㉠인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 즉 합목적성의 문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해당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X — ㄷ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은 행정소송, ㉡은 행정심판'이다. 올바른 표현은 '㉠은 행정심판, ㉡은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ㄹ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과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고, 법원에 제기된 ㉡은 상고심에 이르면 대법원이 판단한다'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은 행정심판이고 ㉡은 행정소송이며, 행정심판 자체의 재결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는 청구를 받는 기관을 거꾸로 배치했고, ㄹ에서는 행정심판도 법원의 심급 절차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ㄱ의 '합당한 목적'은 행정심판이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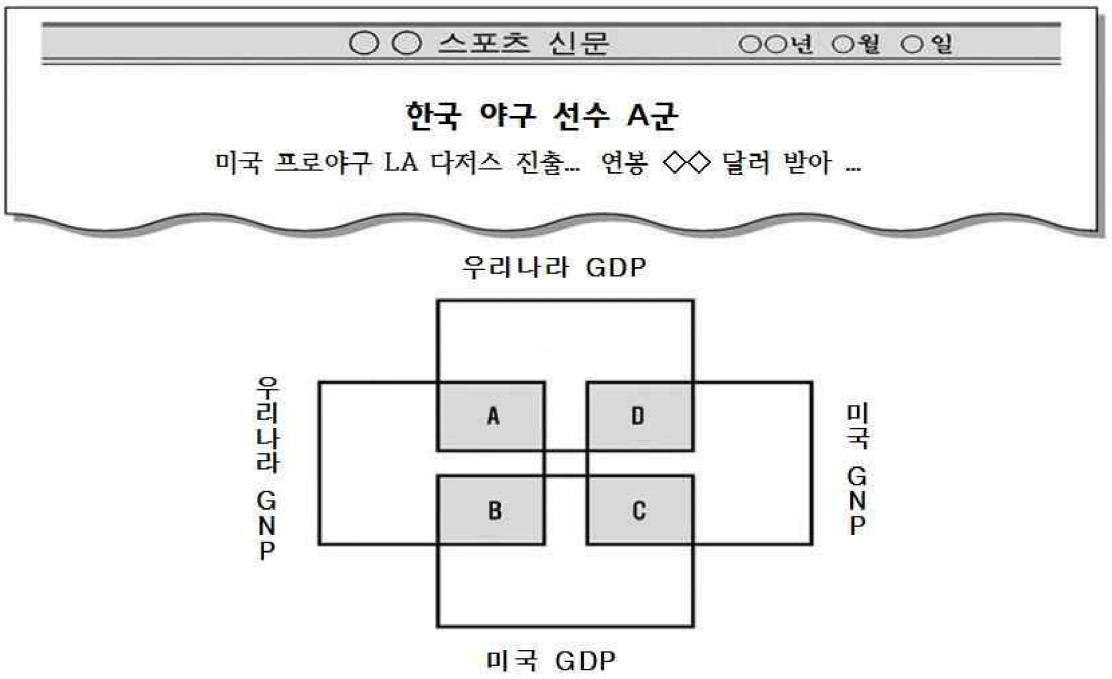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구하면 행정심판, 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면 행정소송으로 구분한다. 그다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심사하고, 취소소송의 인용 확정판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심판은 위법·부당을 모두 보고, 소송의 취소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묶는다.

NoteBase

문 16.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야구 선수의 소득이 속하는 곳을 양국의 GDP, GNP 영역에서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GDP는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GNP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국적의 A군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나라 GNP와 미국 GDP에 포함되므로 도식의 B 영역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우리나라 GDP와 우리나라 GNP가 겹치는 영역으로, 한국 국민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소득에 해당한다. A군의 생산 장소는 미국이므로 A가 아니라 B가 올바르다.
② O — B는 우리나라 GNP와 미국 GDP가 겹치는 영역이다. 한국 국적의 A군이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여 받은 연봉이므로 정확히 B에 해당한다.
③ X — C는 미국 GDP와 미국 GNP가 겹치는 영역으로, 미국 국민이 미국 안에서 생산한 소득에 해당한다. A군은 한국 국민이므로 C가 아니라 B가 올바르다.
④ X — D는 우리나라 GDP와 미국 GNP가 겹치는 영역으로,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례는 국적과 생산 장소가 그 반대이므로 D가 아니라 B가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한국 선수’라는 말만 보고 우리나라 GDP를 고르거나, ‘미국에서 받은 연봉’이라는 말만 보고 미국 GNP를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국적은 GNP에, 생산 장소는 GDP에 각각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나라를 찾아 그 나라의 GDP에 넣고, 이어 생산자의 국적을 찾아 그 나라의 GNP에 넣는다.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다.

암기 포인트

GDP는 장소, GNP는 국적이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벌면 한국 GNP·미국 GDP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甲과 乙의 대화에서 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은?

甲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乙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권력분립에 따른 대통령제적 견제 장치와 행정부 내부의 합의체적 심의 장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면서도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와 같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헌법 제88조와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국정 사항은 그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무회의는 대표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반면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대통령제적 장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지만, 그 존재 자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여 주는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제시한 부분
올바른 표현: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제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X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을 보여 준다.
틀린 표현: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시한 부분
올바른 표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다.

③ O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체 기관이다. 대통령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둔 것은 우리 정부 형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평가된다.

④ X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제적 장치이다.
틀린 표현: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제시한 부분
올바른 표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다.

오답 포인트

탄핵소추권과 법률안 재의요구권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이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통령제적 장치이고, 이 문항에서 찾는 것은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내각제적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제동을 거는 권한이면 대통령제적 견제 장치로 판단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처럼 내각의 구성과 합의체적 심의에 관한 제도이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탄핵소추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적 견제, 국무총리·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사례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2005년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甲이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甲, 乙,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甲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① 甲과 A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甲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甲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③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④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의 재산은 A와 B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A의 상속분은 다시 乙에게 상속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동일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동시사망 추정과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추정'과 '간주'를 구별하고, 각 사망 시점에 생존한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동시사망 추정 =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선후를 알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일단 인정하되,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그 판단이 뒤집히는 제도이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 사실의 증명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망 순서를 알 수 없으면 甲과 A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A가 먼저 사망하면 甲의 사망 당시 자녀 B만 상속인이 되고, 甲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 A와 B가 같은 순위에서 균등하게 상속한 뒤 A의 상속재산은 A의 사망으로 乙에게 상속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동시사망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민법 제30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 틀린 표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올바른 표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O
-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면 甲과 A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A에게 대습상속을 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없으므로 甲의 재산은 생존한 자녀 B가 전부 상속한다.

③ O
- A가 먼저 사망했다면 甲의 상속이 개시될 때 생존한 자녀는 B뿐이다. A에게 대습상속을 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고, A의 어머니인 乙은 A를 대습하여 甲을 상속할 수 없으므로 甲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④ O
- 甲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때 생존한 자녀 A와 B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서 甲의 재산을 1:1로 상속한다. 이후 A가 사망하면 A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생존한 직계존속인 어머니 乙이 A의 상속분을 상속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추정'과 '간주'를 바꾸어 놓은 데 있다. 또한 이혼한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이후 사망한 A의 어머니로서 A의 재산을 상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망 순서를 확정한다. 선후가 불명확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 간 상속을 배제하고, 선후가 증명되면 각 사망 시점마다 생존한 법정상속인을 차례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추정'인지 '간주'인지 법문 표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동일 위난·선후 불명은 동시사망 '추정'이고, 상속은 사망 시점마다 생존자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의 문화 이해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문화 이해 태도 / 질문	(가)	(나)	(다)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예	예	아니요
다른 사회에 자기 문화의 수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은가?	예	아니요	아니요
A	예	아니요	예

① (가)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② (나)는 외부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부정적이다.

③ (다)는 문화의 특수성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④ A에는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가 적절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화 간 우열 판단 여부와 자기 문화의 강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여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고, 다른 사회에 자기 문화의 수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므로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지만, 자기 문화의 수용을 다른 사회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각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하므로 문화 간 우열을 부정하고 자기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자기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보인다. 틀린 표현은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이며, 이는 문화 사대주의인 (나)의 문제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외부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틀린 표현은 '수용하는 데 부정적이다'이며, '외부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문화의 특수성을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④ X —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인 (가)와 문화 사대주의인 (나)는 '아니요', 문화 상대주의인 (다)만 '예'가 된다. 따라서 이 질문은 표의 A처럼 '예-아니요-예'를 만들지 못하므로 'A에 적절하다'는 표현은 'A에 적절하지 않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문화 사대주의는 외부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외부 문화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보는 태도이다. 또한 문화 간 우열을 부정하고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는지 살핀다. 우열을 부정하면 문화 상대주의이고, 우열을 인정하면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외부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문화 사대주의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최고', 문화 사대주의는 '외부 문화가 최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맥락 속에서 이해'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 민주주의의 싹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①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②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③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④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가리키는 지방 자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방 분권의 효과와 중앙 집권의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사무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권력이 중앙 권력을 견제하게 하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은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이 강조하는 가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방 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게 하므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중앙 집권의 장점이다. 지방 자치의 취지는 주민 참여, 지역의 자율성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확대하는 데 있다.
③ O — 지방 자치는 권한을 중앙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분산하여 중앙 집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억제한다.
④ O —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사이에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효율성'과 '통일성'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지방 자치의 핵심 효과는 아니다. 지방 자치는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중시하므로 전국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민 참여·지역 자율·권력 분산·수직적 권력 분립은 지방 자치에, 전국적 통일성·신속한 일괄 집행은 중앙 집권에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 자치는 참여·자율·분권이고, 중앙 집권은 통일·능률이다.

NoteBase